

더민주, 지도체제 개편 놓고 갈등 조짐

대표위원회 · 최고위원회 문제 결론 못내... 우 원내대표 “내주 초 간담회에서 당헌당규 혁신안 허심탄회하게 논의”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당내 갈등 조짐이 나타나자 당 지도부가 숨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이리저리 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이 문제가 당내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주 초에 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당헌당규 혁신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당 구성원은 개별적인 의견 개진을 자제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도 “지도체제나 집행체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이 문제를 또다른 계파 갈등의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당헌당규 문제를 다루는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산하 당헌당규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입법관에서 회의를 열고 새 지도체제 문제를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분과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고위원회와 혁신위원회가 수립한 혁신안 속 대표위원제를 놓고 양쪽의 문제점과 대안, 대책을 분과위 차원에서 토론하고 있다. 결론은 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내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갈

등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권재민혁신위원회는 지난해 시도당 위원장들이 호선으로 대표위원을 선출해 지도부를 꾸리는 대표위원제를 제안했었는데 최근 당내에선 전 당원이 직접 선출하는 최고위원으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최고위원제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상곤 위원장 등 당권재민혁신위원회 인사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계파정치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민생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당원을 주인으로 세우는 정당정치를 할 수 없었기에 계파정치 구조적 틀인 최고위원제를 대신해 대표위원제로 혁신안을 구성했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이에 “최고위원제를 대신해 지역·세대·계층·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

운 지도부는 민생복지라는 당의 이정표를 가장 책임 있게 실현할 지도부가 될 것”이라며 “혁신위원회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혁신안을 담은 혁신당헌당규에 대한 발전적 토론을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만약 토론이 필요하다면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당권재민혁신위가) 어찌 언론에 난리를 치고 마치 혁신안이 아니면 다 죽는 것처럼 했다”며 “혁신안은 제대로 됐었나? 방향이 평평한 길 수 있도록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라며 “이렇게 해놓으면 분과위에서 어떻게 일을 하나. 분과위가 혁신위를 쫓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완벽하게 제대로 해놓고 하면 내가 말도 안 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성주 기자

전희재, 새누리 전국위원회 부의장 선임

새누리당 전희재 전주갑 당협조직위원장 겸 중앙당 전국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임됐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장에 전 국회부의장인 정갑순 의원(울산 중구 5선), 부의장에 전 행정자치부장관인 박명재 의원(포항 재선)과 전 사무부총장인 전희재 전주갑 당협조직위원장을 선출했다.

의장은 전국위원총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한다. 의장단의 임기는 1년이다.

전국위원회는 최고의결기구인 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최고위원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상임고문,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지사, 중앙위원회 주요당직자, 시·군·구 자치단체장, 시·도시·군·구의회의 의원 등 1,000여명 이내로 구성된다.

전희재 부의장은 “비록 원외위원장이거나 당내에서 지난 사무부총장에 이어 재산급의 예우를 받는 부의장에 선출된 것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운천 의원과 함께 전북의 현안 해결과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국위원회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김희욱 전(前)공직자윤리위원장을 추천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구의역 사고 방지법’ 7개 패키지 발의키로

울지로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첫 입법 활동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의 원인을 간접 고용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정규직을 투입하도록 하는 7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와 울지로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무분별한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부터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울지로위원회 첫 번째 입법 활동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울지로위는 “우리 경제는 경영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인력감축, 고용유연화 등 온갖 형태의 비용 절감이 당연시 되고 있다”며 “가장 많은 산업재해 업종인 건설과 조선에 가장 많은 비정규직과 단기간 하도급 구조가 관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번 구의역 사고의 원인을 무분별한 외주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제 경영효율화를 앞세운 무분별한 외주화, 인력감축은 없어져야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명명된 7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 예정이다. 대개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안은 ▲생명 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화영 의원 대표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현장 방문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4-3승강장을 찾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위원(오른쪽 첫번째) 국회의원 의원과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법안에는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전기·가스·석유·병원·통신사·선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 외주용역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 사용을 전면 금지하

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상희 의원의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의 정비와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등 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금지하고 철도 운영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화영 의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안전과 관련한 작업의 경우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울지로위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 같은 법안들이 폐기됐다

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우원석 울지로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견과 외주화가 대폭 확대되면 사고가 안났겠다”며 “새누리당이 이런 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적 타살에 참여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새누리당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며 “이번에는 여소야대니가, 우리가 힘있게(추진)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유성엽 의원, 세월호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제20대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주요 골자는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차와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차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하고(안 제7조제1항),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하고(안 제7조의2 신설)이다.

유성엽 의원은 “법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는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고, 참사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은 법정된 특조위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이대로 활동을 종료시키는 것은 세월호특별법 입법목적과 취지에 벗어나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특조위가 예산편성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워진 점과 참사 원인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선체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신광영 기자

강용구 의원, 대강~금지 지방도 확포장 해결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2)이 남원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대강~금지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해결해 지역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지방도 745호의 단절된 구간(대강~금지)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번 공사는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 대강면 강서리~남원시 금지면 서매리(지방도 745호) 구간을 확포장하는 공사로 382억원을 들여 7월 실시계획공역을 시작으로 202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로 인해 도로간의 연계성이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15km의 거리를 돌아서 가야 했던 주민들이 이동거리가 약 4.5km로 단축되어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물류비용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사를 위해 도로정비계획 반영과 예산확보에 힘을 쏟은 강용구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도정발전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전북도의회는 전북공무원노동조합과 전북도와 함께 지난 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정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통(通)하는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민식 전북노조위원장과 백경태 도의회 운영위원장, 양성민 행정자치위원장, 최훈 도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도정 주요내용을 공유하며 협력방안 모색했다. 특히 도민이 생각하는 전북도를 만들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백경태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3개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며, 주요현안 문제 해결은 상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성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앞으로의 미래비전은 3개 기관이 맡겨져 있어 활기찬 전북을 만들자”고 했다.

전북노조 최민식 위원장은 “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수시로 공유해 막힘 없는 도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공무원 단체의 역할이 퇴색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동하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새누리, 비대위 구성 완료 총선 참패 50일 만에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 50일 만인 2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욱) 구성을 완료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와 상임 전국위를 잇따라 열고 김 위원장 의결안과 비대위원 의결안을 참석 위원들의 박수로 만장일치 승인했다.

김희욱 비대위는 총선 참패로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을 수습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 혁신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새누리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혁신 비대위원장을 맡아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러나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 결과를 타탄 때가 아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을 통해 다시 일어선다”고 혁신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이번 혁신 기회를 놓치면 국민들의 신뢰를 영원히 놓칠 수 있다는 강한 위기의식이 있다”며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고치는 용기와 실천이 필요하다. 반드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단초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대위 앞에 혁신이라는 두 글자가 붙어있는 것은 당명만 빼고 모두 다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을 의미한다”며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든지 실행에 옮기겠다. 신뢰를 되찾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당이 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비대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당 내부인사에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립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권한대행이 당연직 비대위원에 포함됐고, 친박계 이화재 의원과 비박계 김영우 의원이 추천됐다.

외부 위원으로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유병곤 서강대 겸임교수,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민세진 동국대 교수, 임윤선 변호사 등이 의결됐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비상 지도부로서 그 역할을 전당대회까지 잘 해내실 것”이라며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계파주의 혁파, 혁신작업, 쇠퇴작업에 앞장서서 훌륭하게 진두지휘 하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성주 기자

최은희, 도 장애인 정책 집중 추궁

오는 9일 송하진 지사 도정질문에서 “장애인 조례 이행 안돼”

전북도의회 최은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는 9일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송하진 지사를 상대로 전북 장애인 정책을 집중 추궁한다.



최 의원은 “12개의 장애인 관련 조례 이행실태 전수조사 결과 총 65개 조항 중 3개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추가 자료를 요구해 확인해본 결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조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조례가 규정한 각종 계획 수립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계획이며 전년도 계획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기 바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획을 확정하거나,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고도 수립한 계획(대도민 공표의무 미이행),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수

립해야 할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 절차무시행의 사례도 다수 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인권센터 기능을 통합한,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3개 시의 센터들은 상근 인력이 3명에 불과해 장애인 가족지원에만 매달리고 있고 장애인 인권문제에는 손을 겨들이지 않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인권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장애인인권센터를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송하진 도지사가 2014년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다”며 “장애인 인권 등 전반적인 권리보장에 대해 행정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